

전기·가스요금, 오늘부터 인상...4인 가구 월 7400원 더 낸다

전기요금 kWh당 8.0원 ↑ · 가스요금 MJ당 1.04원 ↑

“취약계층 등 요금인상 부담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이 오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총 7400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1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당정 협의회 이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4인 가구 기준 요금 부담이 월 3000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4인 가구 한 달 사용량을 332kWh로 가정할 수 있다. 가스요금도 4인 가구 기준 월 440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한달 가스사용량을 3861MJ로 두고 계산한 것이다.

산업부는 취약계층의 요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요금 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 대해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꾸준히 인상...한전·가스공 재구조 개선될까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해 2·3·4분기 합쳐 kWh당 19.3원 인상됐으며 지난 1분기에도 kWh당 13.1원이 연달아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월, 5월, 7월, 10월 등 4차례에 걸쳐 MJ당 총 5.47원 인상된 바 있다.

전기·가스요금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인상됐음에도, 아직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악화된 재무구조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전이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쌓아온 적자는 38조5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적자가 더 누적됐다. 지난해 말 8조6000억원이었던 가스공사의 미수금 역시 지난 1분기에만 3조원이 더 늘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산업부는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하고, 가스요금도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시장이 안정 되더라도 국제 에너지가격과 국내 도입가격 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그 결과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황과 경영여건은 여전히

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전과 가스공사는 지난 12일 요금 인상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전은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 매각 등을 통해 25조7000억원의 자구계획안을 발표하고, 가스공사 역시 15조4000억원 규모로 재무 개선에 나설 것을 밝혔다.

◆취약계층 전기료 인상 1년간 유예...소상공인 등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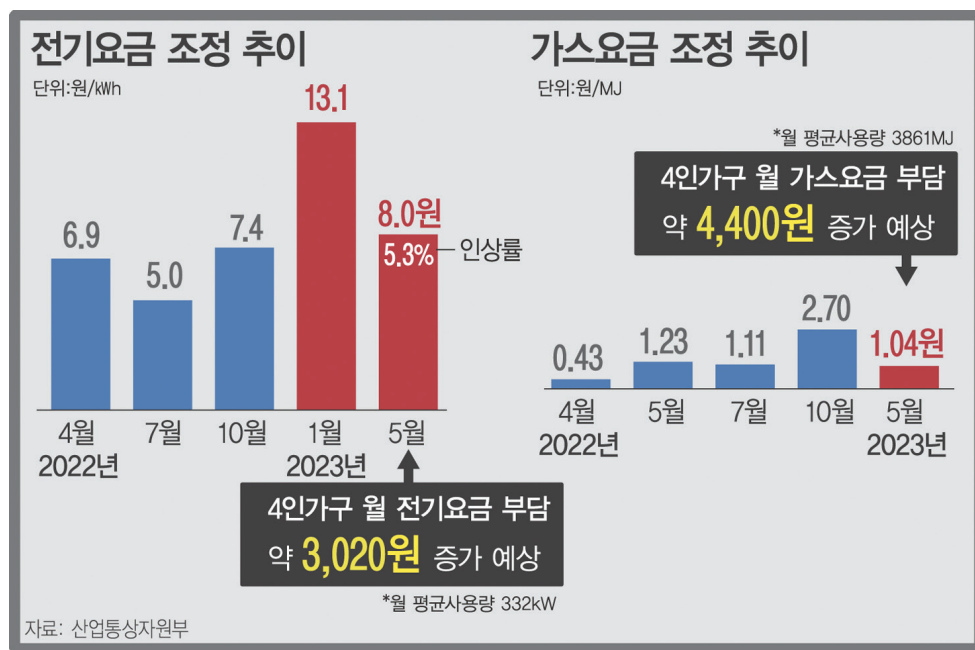
산업부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지난해 대상자의 평균 전력사용량 313kWh까지는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한다.

기존부터 운영 중인 한국전력공사의 복지할인 요금제도도 지속 지원한다. 월 8000원~2만원까지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 적용한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추가·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한다. 올해 6~9월 한시 시행되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는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최대 6개월 분할할 수 있다.



10월에는 가스요금 분할납부제도도 시행한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소매 도시가스사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kWh 당 최대 100원까지 지급하고 가스요금은 가정용 캐시백 인센티브 지급 절감률 기준을 7% 이상에서 3~5% 수준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에너지효율을 제고해 전

력소비를 근본적으로 절감하고 이를 통해 국민여러분들의 요금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고효율가전 구입과 고효율 LED조명 교체를 지원하고 뿌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해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집중 지원토록 한다.

이 장관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용일기자**

文, 2년 만에 광주行...광주시장·전남지사와 5·18 참배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여 만에 광주를 찾아 국립 5·18민주묘지에 참배한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 5·18묘지관리관리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11시~11시30분께 국립 5·18묘지를 찾아 오월영령들에게 헌화·분향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이 광주를 찾은 건 2021년 4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 준공식 이후 2년1개월 만이다.

이날 참배에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함께 동행한다. 강 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김 지사는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각각 문 전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 문 전 대통령과 두 단체장의 만남은 지난 1월 경남양산 사저에서 이뤄진 신년인사

후 4개월 만이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참배 후 문 전 대통령 내외와 시내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오찬 후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광주의 숨결'을 담고 있는 5·18 전야제와 광주비엔날레 관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기르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있는 우치동물원 방문 가능성도 일각

에서 제기됐으나, 5·18추모기간인 점 등을 감안해 5월 광주와 무관한 개인적 행보는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행보에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도 경계하고 있으나, 지역 정가에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의 잇단 패배와 당 대표 사법리스크,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코인 투자' 논란 등으로 안팎으로 절체절명 위기에 휩싸인 민주당에 무언의 정치적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적지 않다.

또 민주당의 심장부이자 오랜 텃밭인 광주

와 전남에서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상생과 화합, 원팀을 당부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2년전 GGM 준공식 당시 “광주시민과 지자체, 노사가 사회적 대타협으로 탄생시킨 광주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민주주의 도시 광주는 ‘상생’이라는 이름을 더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이슬기자

수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제13회 곡성세계장미축제

THE RED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2023. 5. 20. ~ 29.